

# 선진국 문턱 넘었지만 일자리 창출 여전히 미흡

〈3050클럽국 가입〉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2주년(10일)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권 탄생 과정에는 '1700만명의 촛불혁명'이 있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슬로건인 '나라다운 나라'가 이를 방증한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이 2년간 선보인 행보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한 행보를 선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과제들은 첩첩산중 남아있다. 메트로신문은 문 대통령의 2년간 행보를 ▲경제, ▲외교, ▲소통 3개 분야로 나눠 짚어봤다. 〈편집자주〉

## 1 경제

지역경제 회복 전국투어 진행 '3050클럽국 가입' 최대 성과 '불평등 분배교정 등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자리 대통령'과 '민생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종종 뒤따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

령이 되겠다"고 대선후보 시절 국민과 약속했고, 취임 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및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을 발표·추진 중이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 정부에서 최대 경제 성과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3050클럽국 가입(인구 5000만-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꼽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례보고를 하는 모습. /청와대

책 컨퍼런스' 때 "(현 정부 경제 성과로는) 3050클럽국 가입과 국민생활 리스크 관리, 민생여건 개선, 시장질서 정착 등"이라며 "향후 경제 과제로는 취업자 수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현 정부 1기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이어지는 3축 경제전략 아래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며

"이어 2기 경제정책은 경제활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미래대비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현 정부의 2년간 경제 정책 현주소를 진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재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 성과 토론회' 때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방향 설정이 적절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다만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北 비핵화' 진전 이끌어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 /청와대

## 2 외교

남북회담 3회, 북미회담 2회 진행 '韓·北·美 선순환적 진전 강화할 것'

문재인 정부의 2년간 최대 성과를 꼽자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가 필요함을 일관되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평화 최우선' 남북정책기조를 제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 및 대화 용의를 표명했다.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를 시점으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던 '북한 비핵화'

가 첫발을 땀 셈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평화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월 말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그렇다. 당시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뿐인가.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쏘았다.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순식간에 퇴보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걸어온 한반도 현주소는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전혜성 통일부 차관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 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발전과정으로 진입했다"고 운을 뗐다. 전 차관은 "한반도 평화변명이 동북아로 전파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신한반도체제'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신뢰로 남북

관계-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퇴보되지 않았음을 전 차관이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은 컨퍼런스 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한 발전을 보인 2017년 안보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전쟁 불가'라는 확고한 의지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 합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따라서) 현 정부는 임기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고 그동안 미진했던 남남대화와 국론통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 靑 '국민청원' 등장... 국민체감 정책추진 총력

## 3 소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이를 방증한다. 우선 국민 체감 정책에 현 정부가 공을 들이는 건 촛불정신과 소통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촛불정신'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진력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국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소통을 추진했다. 지난 2017년 국민 참여로 만드는 국정과제(광화문1번가, 신고리5·6호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해 소통하는 모습. /청와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원전 폐쇄 여부 결정 등 국민적 요구와 의사를 담아내는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한 게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국민소통은

디지털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재탄생했고,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공론창구가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처음 등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가 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청원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소통광장 및 직접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우승준 기자

남양주시 공고 제2019-194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고시

2019. 5. 10.

남 양 주 시 장

- 고 시 명 : 제3차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고시기간 : 2019. 05. 10. ~ 05. 24
- 고시내용
  - 가. 개요
    -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 대상지역 : 남양주시 전지역(5개 읍, 4개 면, 7개 동) 및 남양주시 인접 시·군
    - 내 용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 보행환경 실태
      -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교통정책과
- 문의처 : 남양주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자(☎031-590-4717)